

## "조사 불응에 과태료 부과 안 한다"…입장 선회한 통계청

등록 2019.01.07 16:29:34



【서울=뉴스시스】강신욱 통계청장이 30일 대전시 정부대전청사 청장실에서 유럽 연합 통계국(Eurostat) 마리아나 코체바 처장을 만나 향후 양자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8.11.30. (사진=통계청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스시스】장서우 김진욱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이 7일 가계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불응 가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다만 조사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사를 심각히 방해하는 요인이 초래될 수 있는데 그런 요인들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신중히 고민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새롭게 개편해 적용하기 시작한 올해부터 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이다. 강 청장은 "국민들께 최대한 끝까지 부탁드리고 자세를 낮춰 조사 취지를 설명하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통계청이 하루 전날 내놓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설명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 통계청은 이 자료에서 "가계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현장 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었다.

강 청장은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불응 가구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을 과거와 같이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현장 조사 요원에 대한 조사 대상 가구의 폭언이나 폭력 등이 있을 경우에 대해선 "조사 요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상황에 대한 조치는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uwu@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